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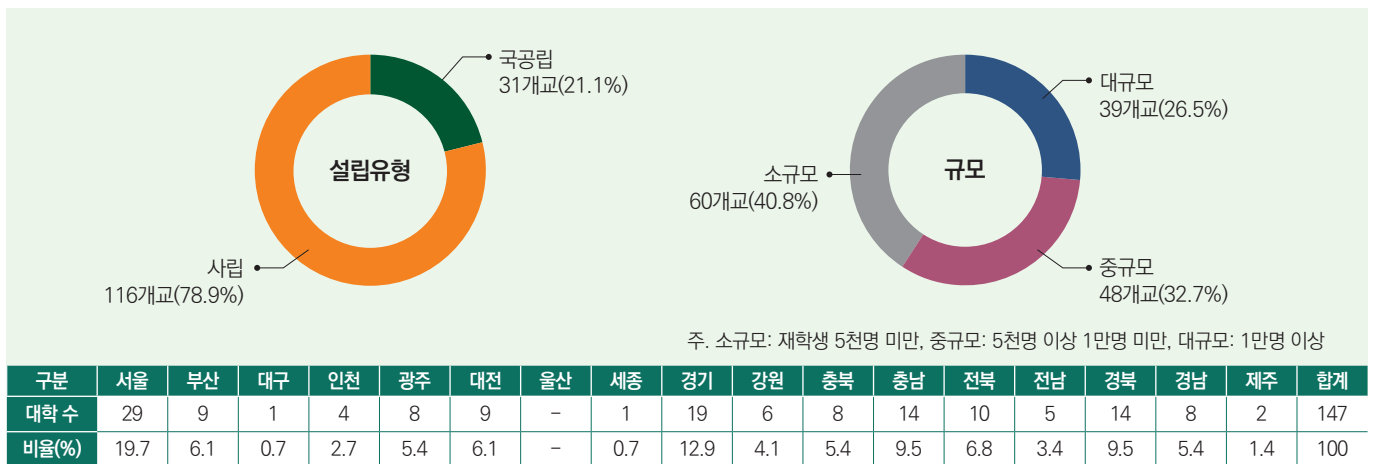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Ⅱ)

: PART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특집

2025 KCUE Survey of University Presidents(Ⅱ)
: PART 2. Special Edition on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I. 조사개요

- **조사목적**: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대상의 설문을 통해 RISE에 관한 대학 현장 의견 수렴
- **조사기간**: 2025년 4월 30일(수) ~ 5월 27일(화)
- **조사방법**: 전자공문 및 이메일 안내를 통한 웹 설문조사
- **조사대상 및 응답율**: 회원대학 중 191개교* ➡ 147개교 응답(77.0%)



[그림 1] 응답대학 특성

II. RISE에서의 우려 사항

- RISE에 대한 대학의 주요 우려 사항 9개 항목 중 우선순위에 따라 1~3순위로 선택

〈표 1〉 RISE에 관한 대학의 우려 사항

항목	가중치 반영합계**	우선순위별 응답 대학 수			
		총합	1순위	2순위	3순위
RISE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	168	85	16	51	18
RISE의 정책적 지속가능성	167	77	33	24	20
지자체의 의지와 여건, 정책시행 등에서 지역별 편차	135	73	22	18	33
지역특화산업 중심 학문분야 지원으로 인한 대학으로서의 정체성 약화	98	47	17	17	13
RISE 성과지표 산출 방식의 타당성 부족	84	40	18	8	14
지자체와 대학 간 소통 및 협력 부족	84	48	10	16	22
5개 일몰 재정지원사업(RIS, LINC 등)의 인력, 성과 등의 연속성 단절	78	34	20	4	10
지자체 권한 충돌 및 예산 문제로 인한 대학 간 초광역 협력 저해	53	28	8	9	11
기타	15	9	3	0	6

- 대학에서 가장 크게 우려한 사항으로, 'RISE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과 'RISE의 정책적 지속가능성'이 지목됨. 이는 새롭게 추진된 RISE와 정부의 과도기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제도의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됨

- 그 뒤를 이어 '지자체의 의지와 여건, 정책시행 등에서 지역별 편차'의 발생이 대학에서 인식하는 우려 사항으로 나타남. 지자체의 적극성이나 수행 역량에 따라 RISE 운영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제도의 형평성 제고 및 일관된 정책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총 197개 회원교 중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6개는 문항 특성상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음(국군간호/공군/육군/해군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본 자료에서 가중치 반영합계는 우선순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한 값으로, 1순위를 3점, 2순위를 2점, 3순위를 1점으로 계산함

- 한편, 설립유형과 소재지에 따라 대학의 우려 사항이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

: 사립 대학의 주요 우려 사항으로는 'RISE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과 'RISE의 정책적 지속가능성'을, 국공립 대학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중심 학문분야 지원으로 인한 대학으로서의 정체성 약화', '지자체와 대학 간 소통 및 협력 부족'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함. 사립 대학은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 리스크에 민감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과 정책 운영의 안정성에 비교적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대학의 소재지별로도 우려 사항이 다르게 나타나며,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RISE 특성상 **지역대학의 여건에 따라 우려 사항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함. 예를 들어, 전체 집단에서 비교적 낮은 순위를 보였던 'RISE 성과지표 산출 방식의 타당성 부족'은 전북과 경남에서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응답되었음

〈표 2〉 설립유형 및 소재지에 따른 우려 사항

항목	가중치 반영합계 순위		항목별 가장 높은 응답 지역
	국공립	사립	
RISE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	4	1	부산, 경기, 충남, 전북
RISE의 정책적 지속가능성	5	1	서울, 광주, 대전, 경기, 강원, 경북
지자체의 의지와 여건, 정책시행 등에서 지역별 편차	3	3	서울, 인천, 전남
지역특화산업 중심 학문분야 지원으로 인한 대학으로서의 정체성 약화	1	5	인천, 충북, 경남
RISE 성과지표 산출 방식의 타당성 부족	7	4	전북, 경남
지자체와 대학 간 소통 및 협력 부족	1	7	인천, 전북
5개 일몰 재정지원사업(RIS, LINC, LIFE 등)의 인력, 성과 등의 연속성 단절	8	6	-
지자체 권한 충돌 및 예산 문제로 인한 대학 간 초광역 협력 저해	6	8	-
기타	9	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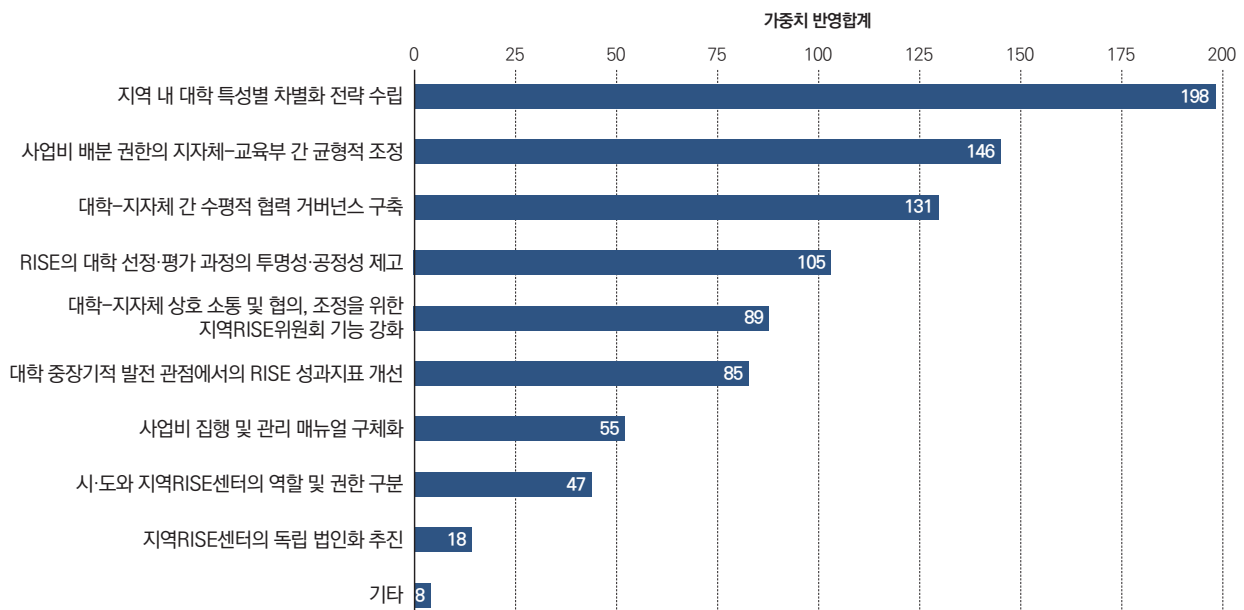
주. 사·도별 응답 대학 수가 2개교 이하인 경우, 개별 대학의 응답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결과에서는 제시하지 않음

...

III. RISE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 RISE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10개 항목 중 1~3순위로 선택

-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 내 대학 특성별 차별화 전략 수립'이 도출됨. 대학의 특성과 강점을 고려한 맞춤형 대학 지원 및 지역혁신 전략 수립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그 뒤를 이어 '사업비 배분 권한의 지자체-교육부 간 균형적 조정'과 '대학-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나타남. RISE에 대한 사업비 배분 권한이 지자체에 치중되고 있는 상황을 방증하는 결과로, 교육부 차원의 권한 조정과 더불어 대학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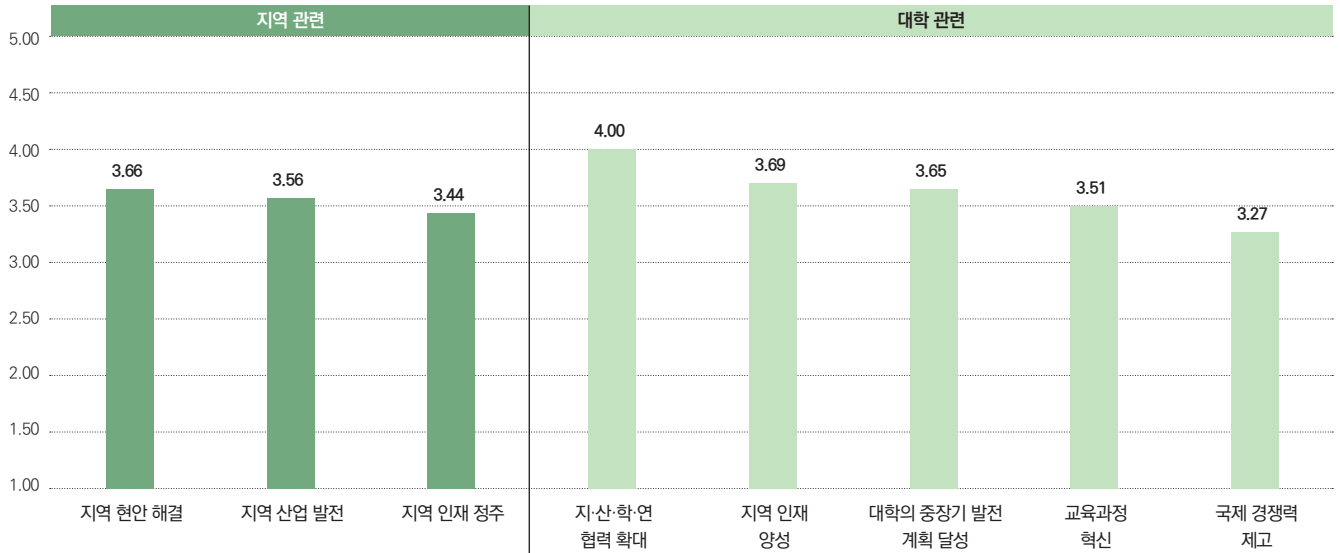


[그림 2] RISE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IV. RISE의 긍정적인 기여도 전망

● 지역과 대학 관련 성과 영역으로 구분하여 RISE의 긍정적 기여 정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응답

- 지역 관련 영역에서는 RISE가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다만, '지역 인재 정주'의 평균은 3.4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대학 관련 영역에서는 RISE를 통한 '**지·산·학·연 협력 확대**'를 가장 기대함. 그 뒤를 이어 대학 총장들은 '지역 인재 양성',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달성', '교육과정 혁신'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3] RISE가 각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는 정도

V. 교육부(중앙RISE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

● 교육부(중앙RISE위원회)가 RISE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 9개 항목 중 1~3순위 선택

- 교육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로 나타남. 앞서 'II. RISE에서의 우려 사항'에서도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주요한 우려 사항으로 도출된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로 볼 수 있음.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나타남. 지자체와의 협력 과정과 RISE의 평가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 뒤를 이어 '지·산·학·연 협력 관련 규제 개선'이 높게 나타나, 향후 교육부 및 중앙RISE위원회 차원에서 다양한 규제 발굴 및 개선 노력 필요함
- 한편, 대학 규모에 따라 교육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이 다소 다르게 나타남.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중시되었으나, 3~4위로 대/중규모 대학은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소규모 대학은 지자체의 고등교육 이해 제고 및 지자체의 대학 지원 역량 강화를 응답함. 대/중규모 대학이 다양한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우선시하는 반면, 소규모 대학은 인적·물적·내용적 차원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표 3>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

항목	가중치 반영합계	응답 대학 수	대학규모별 누적가중치 순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안정적인 예산 확보	265	110	1	1	1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204	106	2	2	2
지·산·학·연 협력 관련 규제 개선	103	51	3	3	6
학사(학위, 학교 밖 이동식 교육과정 등) 관련 규제 개선	82	37	4	4	5
지자체 및 지역RISE센터의 고등교육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인력 지원	79	46	5	6	3
대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제공	75	41	6	5	4
지자체 평가 성과지표의 개편 및 확정	44	29	7	7	6
대학 간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지원	25	18	8	8	8
기타	5	3	9	8	9

VI. 지자체(지역RISE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

- RISE의 안정적인 안착과 운영을 위해 지자체(지역RISE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 8개 항목 중 1~3순위 선택

- 지자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는 **‘지자체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계획 수립’**으로 나타남. 안정적인 예산 확보는 ‘II. RISE에 관한 우려 사항’과 ‘IV.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에 이어 본 문항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응답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그 뒤를 이어 **‘지자체-대학 간 의사소통 체계 개편’**, **‘지역RISE센터의 고등교육 전문성 제고’**

등의 항목이 순위권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구조적 기반 마련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높음을 시사함

- 한편, 대학들이 희망하는 지자체 지원 사항에 대한 시·도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대부분의 시·도에서 ‘안정적인 재정 지원 계획 수립’을 가장 중요한 지원 사항으로 응답하였으나, 인천과 전북에서는 ‘지자체-대학 간 의사소통 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조금 더 높게 인식함. 이 외에도 지자체에 요청하는 사항이 시·도별로 다르게 나타남. 결국, RISE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 차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기반으로, 시·도별 특성과 맥락에 따라 RISE 전략의 고도화가 필요함

〈표 4〉 시·도별 대학에 대한 지자체 지원 요청 사항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응답 대학 수 (개교)	29	9	4	8	9	19	6	8	14	10	5	14	8
지자체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계획 수립	1	1	2	1	1	1	1	1	1	2	1	1	1
지자체-대학 간 의사소통 체계 개편	2	3	1	5	5	2	2	2	2	1	4	3	3
지역RISE센터의 고등교육 전문성 제고	4	4	4	3	3	4	3	6	3	4	1	3	2
지역 내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지원	3	2	5	2	4	3	6	4	4	4	5	2	5
연차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공정성 확보	5	5	3	6	5	5	4	4	6	7	1	7	4
지역 인재 채용 연계 정책 마련	6	6	7	3	2	7	5	3	5	6	5	5	5
대학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	6	7	7	7	5	6	7	6	7	3	7	6	7
기타	8	7	5	8	8	8	7	8	8	8	7	7	8

주. 시·도별 응답 대학 수가 2개교 이하인 경우, 개별 대학의 응답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결과에서는 제시하지 않음

Remark

RISE의 성공, 예산안정성·예측가능성·자율성·차별화로부터

1. RISE 정책 운영의 예산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RISE 정책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예산 확보와 안정적인 재정 지원 계획 수립임. 충분한 예산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 지원 계획의 부재는 정책 효과를 저해하며, 대학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교육부와 지자체는 중장기 재정 지원 계획을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견고하게 마련하고 정책 목표와 운영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 대학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 추진

대학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교육부와 지자체는 대학들이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자율적으로 혁신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함. 또한, 동일 지역 내 대학이라도 각기 다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대학들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고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시너지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함